

비핵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

서울대 통일평화연, 2022. 4. 26.

<목 차>

정세에 대한 인식

국가의 선택

대북정책의 방향

“봄이 온다!”

“한반도에 진정 봄은 오는가?”

“북핵문제가 풀리면 한반도에 봄은 여지 없이 온다.”

“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반도의 봄은 오지 않는다.”

□ 대북포용정책의 환경

- 국내적 민주화,
- 베를린장벽 붕괴, 국제냉전체제 붕괴, 글로벌리즘

□ 대북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

- 노태우 정부: 한국문제의 한국화, 7.7선언
- 헌법: 통일원칙 규정(1988)
- 민족공동체통일방안 (1989)
- 남북교류협력법/ 남북협력기금법(1990)
- 남북기본합의서(1991)
-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(1991)

남북관계의 흐름

△ 대북포용정책의 시작과 1차 핵위기(NPT 탈퇴)

△ 대북포용정책의 본격적 전개(햇볕정책)와 2차 핵위기(우라늄 농축 발각)

△ 3차 핵위기(1차 핵실험)와 대북포용정책의 퇴조

△ 4차 핵위기(핵무력 완성 선언)와 남북/ 미북 정상회담의 실효(失效),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성과 없음.

△ 5차 핵위기(전략무기 개발 5개년 계획, 핵 미사일 실전배치)가 다가오는 중

△ 탈냉전 시기와 전혀 다른 세상

- 북한은 핵무장에 의한 전략구사(8차 당대회)
-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실패
-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의 재편, 반세계화, 신냉전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질서의 쇠퇴를 의미
- 국내정치의 혼란(진영대결, 포퓰리즘), 민주주의의 위기
- 4차산업혁명, 사이버, 코로나,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
- 과거의 패러다임이 작동 불가, 그러나 정책 지체현상

□ 국가의 선택

-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선진적인 문명사회 지향
- 안보를 확보,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
-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, 평화체제 수립
-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국가 건설
- 개인의 자유, 인권, 복리 보장, 부강한 통일국

□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

- 약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핵에 대한 한·미 확장억제를 강화

- 한미 '포괄적 전략동맹' 강화

동맹간 신뢰 회복으로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 확대 기반 구축

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

뉴 프론티어분야(신기술, 글로벌 공급망, 우주, 사이버,

원자로 등) 협력 확대하고 심화

- 역내 관련국들이 함께 하는 열린 협력 추구

□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

-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중 외교 구현
- 한중 정상 간 교환 방문 실현
- 경제, 공중보건, 기후변화, 미세먼지, 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확대하고 심화
- 한중 간 북핵문제를 포함한 현안과 잠재적 갈등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
-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·중 고위급 핫라인 설치

□ 경제안보

△ 공급망, 무역·투자, 데이터 안보 구현

-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

△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 확충 및 신성장 산업 지원

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

- 원자력발전, 바이오, IT, AI, 5G, 반도체, 수소차, 전기차,

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대외 진출과 국제 협력 지원

△ 경제안보 외교 대화체 및 국제공조 적극화

□ 한반도에서 전쟁억제가 우선적인 과제

△ 북한은 무력도발의 의지와 능력 보유

(7차 당대회, 8차 당대회 보고),

-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가 핵심 전략

- “남조선 군대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”

△ 힘에 의한 평화,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

- 자주국방력 건설을 통한 힘의 균형과 군사적 안정성

확보 및 한미확장억제 등 한미동맹 강화

□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

△비핵화 없이는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이 어려운 현실

△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

-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

-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

- 북한의 비핵화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(2+2)

△ 직접 당사자로서 국제공조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

△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

△ 비핵화 진전에 따라 발맞춰 경제협력을 추진

-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면

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추진,

남북 간 공동발전계획 협의

- 북한의 비핵화 완료시 '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'

북한경제의 현대화 지원, 남북공동발전 추구

□ 남북관계 정상화

△ 서로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

- 헌법정신과 국민 정서와 기대를 존중

- 대화의 문호를 열어놓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

- 불법과 불합리한 행동 차단, 남북관계 정상화

- 남북 '그린 데탕트' 추진

△ 민족정체성 유지

- 남북 상호개방과 소통·교류로 전환, 언어의 이질화 방지, 문화적 동질성 유지
- 비핵화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 실시(재난, 인산부 영유아)
-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

△ 탈북자 보호 및 성공적 정착 지원

- 탈북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초기정착 주력

△ 북한인권개선 추진

- 「북한인권법」 충실한 집행

우리나라는 **세계 유일의 분단국가**이지만,

국가의 규모와 국력이 두 배로 커지고

국민들이 두 배로 더 잘 살 수 있는

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나라!

△ 통일을 국가 목표로서 확고하게 유지

-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반통일론을 경계

△ 통일을 지향하는 consensus 확립

-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

헌법 전문, 제3조, 제4조, 제 66조 3항, 제 69조

- 민족공동체 통일방안, 남북한 잠정 공존과 단계적

통일

-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지향의 특수관

계

△ 국민합의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

-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의 국민합의 우선
- 이미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정신 존중
先 평화정착 및 점진적 문화·경제적 통일,
後 정치적 통일 추진
- 개인의 자유·인권·복리가 보장되고
더 크고 더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 지향

감사합니다.